

세종시 출범, 충남도와 상생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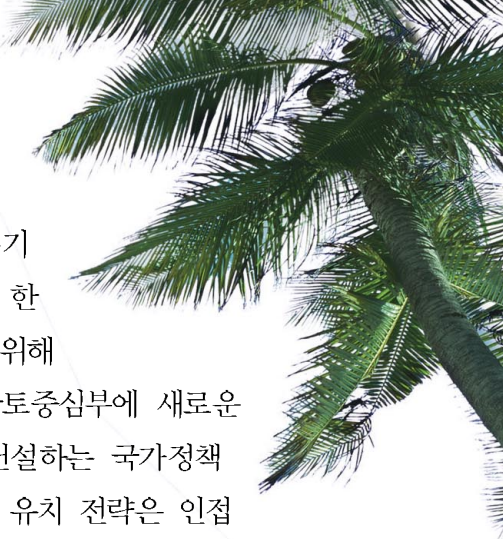
김용웅 |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공식 출범한다. 올해는 충청남도가 독립적인 지방행정단위로 탄생한지 116주년, 그리고 대전시가 충청남도로부터 분리 독립한지 23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종시의 출범은 충청남도의 도 행정은 물론 지역주민생활과 경제-사회발전에도 많은 충격과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기능과 공간의 변화 없는 지방행정구역의 인위적 분리는 주민생활의 불편과 경제-사회적 활동에도 장애와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마련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 간 상생협력은 정책적 당위성이나 정치적 의지의 표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 간 협력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행정제도와 관행, 지역주민과 경제주체의 인식과 문화 및 행·재정적 지원제도와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종시와 충청남도의 상생과 협력적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과 핵심과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세종시와 충청남도 등 인접지역 상호간 산업, 경제, 문화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역할분담 없이 새로운 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면 세종시와 충청남도 등 주변지역 간에는 불필요한 개발경쟁과 경합이 증대되어 막대한 자원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 건설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닌 대도시권을 형성하려는 국가적 정책목표의 달성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세종시는 수도권의 경제 및 사회부문의 다양한 중추기능과 기관을 유치하는 수요창출형 도시조성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세종시는 충청권내 부족한 주택 및 도시개발수요 충족을 위해 건설하는 도시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중심부에 새로운 국가발전 거점을 형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국가정책 차원의 신도시이다. 아파트 일반분양을 통한 주변지역인구의 유치 전략은 인접 지역의 공동화와 함께 세종시 자족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종시의 경제적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이전과 함께 국공립금융기관 본사, 대기업 본사, 전국단위 언론사 등 다양한 부문의 중추관리 기관과 국가적 선도 산업을 병행 유치해야 한다. 세종시 조성의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세종시와 주변도시 간 예상되는 도시시설 및 서비스수준의 극심한 격차현상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세종시를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첨단기술의 세계적 수준의 모델도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에는 심각한 발전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세종시와 주변도시 간 심각한 격차의 해소 없이는 상호 수평적인 연계와 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세종시와 주변 도시의 격차해소는 지방자치단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앞으로 만들어 갈 미래도시이다. 따라서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방안은 도시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세종시 출범 초기단계에는 정부기관과 이전가족의 정착, 경제-사회중추기관과 기업의 유치 등 세종시의 자족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치중하고, 안정 및 성숙단계에 맞추어 상호보완과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종시의 자족적 성장기반이 마련되어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시와 상생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세종시를 포함한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과 행·재정적 지원기반 확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와 상생협력은 충청인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역리더십의 발휘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세종시와 상생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